



주간통일정세 2011-49(2011.11.28 ~ 12.0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4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TV, 김정일 군합동훈련 관람 뒤늦게 공개(11/29, 조선중앙TV)**
 - 얼마 전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청와대 불바다'를 언급했던 북한이 29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인민군 육해공 합동훈련을 관람하는 영상을 뒤늦게 공개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5시32분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라는 제목의 16분짜리 기록영화를 내 보이며, 중앙TV는 "이 합동훈련이 올해 9월7일에 있었다"고 밝힘.
 - 이 합동훈련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는 이날이 처음으로 중앙TV는 이례적으로 두 달여 전의 군사훈련 영상을 뒤늦게 공개
 - 기록영화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 군 고위간부와 노동당 간부들 외에 일반 시민까지 훈련을 관람하는 모습이 보이며, 방송은 기록영화를 통해 북한 해안포·방사포·미사일 발사, 비행기의 폭탄 투하, 미사일로 비행기 요격, 해군 함정의 훈련 장면 등 북한 육해공 군부대의 훈련모습 전부를 공개

- **北, 이임 라오스대사에 1급 친선훈장(1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와린스라삭 주북 라오스 대사에 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와린스라삭 대사가) 조선과 라오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힘.

- **김정일·정은 부자 또 공군부대 시찰(12/3, 조선중앙통신)**
 - 최근 잇따라 군부대 시찰에 나서 주목받아온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또다시 공군부대를 찾아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공군 제378군부대를 방문해 조종사들을 격려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지도에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차수·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옥 당 제1부부



장, 김원홍·박재경·현철해 대장 등이 동행했고 이병철 공군사령관이 현장에서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중앙통신은 "378군부대에서는 조종사들의 조종술, 항법술 등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실시 전투과정에 맞다들 수 있는 극악한 정황들을 끊임없이 조성하면서 강도높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제233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불과 엿새 동안 세 차례나 군부대를 찾아 남한정부의 군사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의 군부대 시찰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 지도 및 조선인민군 제169군부대 관하 중대 시찰(11/30, 중통·중·평방)
 - 김정은(黨 중앙군사총 부위원장)과 軍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동행
- 김정일, 조선인민군 공군 제37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12/3, 중·평방·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캄보디아 北대사에 '홍기철' 임명(11/28, 중통)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1.29 작별방문 駐北 라오스 대사와 담화(11/29, 중통)
- 최영림 총리, 11.30 離任 駐北 라오스 대사와 담화(11/30, 중통·중방)
- 김영남, 12.1 작별 방문한 駐北 라오스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2/1, 중통)
- 최고인민회의 '정령'(제1970호, 11.24字), '3중3대혁명붉은기'(조선혁명박물관)·'2중3대혁명붉은기'(평양일용품공장 등 14개 단위)·'3대혁명붉은기'(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등 41개 단위) 수여(12/3, 중방)

나. 경제

● 北 '연평도 긴장' 활용해 주민 경제동원(11/2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북한이 연평도 포격 1년을 맞아 사회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이를 주민 경제동원에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28일 평양 3·26전선공장의 생산 소식을 전하면서 "공장의 일꾼과 노동계급이 새 전쟁 도발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역적 패당을 때려 부수는 심정으로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치(망치)를 역세계 틀어잡고 함남의 불길 높이 연말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밝힘.
- 평양방송도 28일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과 탄부들이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역적패당의 머리 위에 혁명적 대고조의 불벼락을 퍼붓는 심정으로 함남의 불길 높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 있다"고 보도
-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는 "대외적 위기감을 내부결속에 활용하는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통치방식"이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희생을 강요해 경제적 성과를 내는 동원형 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 특히 김정은 체제가 아직 공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대외적 긴장을 내부 통치에 활용하는 전략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뉴스는 전함.

● 유엔보고서 "北주민 66% 끼니 걸러"(11/29,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의 66%가 일주일에 최소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파악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함.
- FAO와 WFP는 지난 10월3~17일 북한의 9개 군, 67가구를 방문해 식량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최근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 담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주민 대부분이 식사에 물을 섞어 불려 먹고 곡물과 야채, 된장, 간장으로 된 식사를 주로 하고 있었다"고 전함.
- 또 도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90%가 협동농장에 있는 친척에게서 식량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고, 북한 주민이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보다 협동농장 구성원과 집안에 텃밭과 가축을 기른 이들의 식사가 훨씬 나았다"며 "올해 북한 주민이 곡물을 확보하는 데 국영상점, 농민시장이 아닌 장마당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
- 한편 유엔은 "북한에서 지난겨울 강추위로 씨감자를 비롯해 겨울과 봄에 심을 종자가 60%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수입으로 부족한 종자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中 연변기업, 北 김책시 철광 개발 나서(11/30,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철광기업이 북한 김책시의 철광 개발에 나섰다"고 연변일보가 30일 보도



- 신문은 연변 안도(安圖)현의 진룽(金龍)철광이 올해 초 북한과 협의를 거쳐 김책시의 철광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미 채광을 위한 장비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힘.
 - 신문은 김책시 철광의 매장량이나 연간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운송한 채광 설비 규모가 6천만 위안(10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상당한 규모를 갖췄을 것으로 추정
 - 중국의 완상(萬向)자원유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북한 혜산동광과 2007년 합자해 설립한 혜중광업합영회사가 지난 9월부터 혜산 구리광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는 등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지하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 최대 철광인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도 확보
- 유엔 "내년 北 기아주민 300만 명으로 감소"(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에 굶주릴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이 3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이 수치는 올해 북한에서 굶주림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된 600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WFP와 FAO가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반영
 - 北 화폐개혁 2년...환율·쌀값 급등에 이증고(12/1, 연합뉴스; 데일리NK; 오늘의 북한소식;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물가를 잡겠다며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주민은 지속적인 쌀값 폭등과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은 2009년 11월30일 17년 만에 기존화폐와 새 화폐를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을 막고 화폐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북한당국은 화폐개혁 직후 쌀은 kg당 23원, 옥수수는 kg당 8원이라는 새로운 국정가격을 고시하기도 했지만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부터 가파른 폭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뉴스는 전함.
 - 데일리NK가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의 쌀값 동향을 2009년 여름부터 추적해 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 지역의 쌀값은 2009년 하반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12월 말부터 요동치기 시작
 - 대북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은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평양에서는 2개월 만에 쌀값이 50% 이상 올랐고 이 같은 추세라면 12월에 kg당 5천원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전함.
 - 자유아시아방송(RFA) 역시 지난달 29일 중국을 오가는 평양 주민들의 말을 빌려 같은 달 25일 평양과 신의주 장마당의 100달러당 환율이 각



각 42만5천원과 42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함.

● **민화협, 北안주시에 밀가루 1천t 지원(12/2,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는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밀가루 1천t과 분유 4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
- 민화협은 우선 1차 지원분인 밀가루 200t(시가 1억 원 상당)을 2일 오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

● **"WFP, 12월중 대북식량 3만2천t 지원"(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이달에 식량 3만2천700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지원 담당관은 12월중 올 들어 월 지원 규모로는 가장 많은 약 3만2천700t의 식량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RFA측에 밝힘.
- 스카우 담당관은 11월의 식량 지원 규모는 10월중 145만 명에게 약 6천400t의 식량을 지원한 것에 비해 40% 정도 줄어든 것이라며 "원료가 부족해 12곳의 식품가공 공장에서 만드는 혼합식품과 영양과자의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
- 또 내년 3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60세 이상 노인 등 350만 명에 대해 식량을 제공하려면 약 2억1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지원금은 2일 현재 약 6천600만 달러로 필요 예산의 32%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 **"北, 中특구법과 유사한 새 특구법 마련"(12/4, 연합뉴스)**

- 북한이 나진·선봉과 황금평 등 경제특구에 적용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 조만간 전면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보도
- 4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효율적인 외자유치 조달방안, 구체적인 세부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었으며, 최근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 인사들이 이 법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대북소식통은 "이 법안은 특구 개발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주요내용은 선전(深川(土+川))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을 찾은 김성기 부상이 선전시를 찾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새 경제특구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중국 언론은 김 부상이 지난달 27일 장원(張文) 선전시 부시장을 만나 "선전의 비범한 발전상은 사람들을 고무하고 있다. 선전특구의 성공적인 경험을 배우는 것도 중국을 찾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함.



-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특구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본다. 북한이 특구를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게 투자환경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인데 북한 역시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양강도 김형직군' 일대에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 마련 및 '검덕산 동부지역'에 광산을 세울 수 있는 확보방향 마련 등 자원개발부문 투쟁 성과 보도(11/28, 평방)
- 北, 린산·신계·명간·길주 등 현대적 물고기생산기지들이 많이 꾸려져 "인민들의 유족하고 풍성한 생활을 담보하고 있다"고 소개 선전(12/1, 중통)

다. 사회·문화

● 평양 지하철·버스에도 교통카드 시스템(11/29,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지하철에 이어 버스 등 대중교통 전반에 교통카드 사용을 확대한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 조선신보는 이날 '변모되는 수도의 거리풍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하철은 이미 요금정산을 카드로 하여 이용자들이 출입구를 현금 없이 통과하는 체계가 실현됐다"며 "그 이외의 교통수단도 전망적으로 카드를 도입하게 된다"고 밝힘.
- 또 신문은 "최근 평양에서는 교통보안원 대신 신호등이 전면적으로 이용된다"며 "평양 거리풍경의 하나였던 여성교통보안원의 모습은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도 차량통행이 잦을 때에만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작년 하반기부터 평양에 도입된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은 사거리 입구의 정지선 60m 전방에 설치된 감지기가 통과차량 대수를 계산, 차량이 많은 도로 쪽에 푸른 신호등이 오랫동안 켜지게 하는 방식
- 신문은 "평양에서는 작년 가을 이후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측 운전석 차량은 일체 운영을 못 하며, 앞으로 지방에서도 이런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힘.
- 또한 신문은 "사고 방지의 하나로 올해 3월부터 모든 차량이 낮에도 조명을 켜고 운행하도록 의무화됐다"고 전함.

● 北조선중앙통신, 내달 중국어 서비스 개시(1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내달부터 중국어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힘.
- 중앙통신은 "창립 65주년(12월 5일)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중문에 의한 기사, 사진, 동영상 보도를 시작한다"며 "중문 보도는 조·중 간 전



통적 친선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세계의 수많은 중어 사용자 속에서 조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이로써 중앙통신이 홈페이지(<http://www.kcna.kp>)를 통해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 일어, 스페인어에 이어 4개 국어로 늘어남.

● "전력난 北 나선특구엔 평양처럼 네온사인"(12/4, 연합뉴스)

- 북한이 외자 유치에 나선특구에 네온사인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4일 "중국 측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난 8월부터 나선특구의 주요 도로와 기관, 호텔, 식당 등에 네온사인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의 이런 조치는 외국인에게 화려한 야경을 보여줌으로써 나선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투자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특구 내 네온사인 설치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정보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지만 나선특구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외국인을 포함한 나선특구 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나선시 상품전시회관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대북소식통은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노동당출판사, 도서 '전설적 위인 김정일동지' 제3권 '영도예술의 거장' 출판(11/28, 중통)
- 조선기록영화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서(1)' 제작(11/30, 중통·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하원, '한국전 실종자 송환 결의안' 심의(12/1,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쟁포로와 실종자 그리고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제376호'를 심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당초 결의안을 상임위 상정



절차를 생략한 뒤 곧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널드 만줄로 아테소위원장과 협의해 소위에서 일단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이날 심의된 결의안은 미국이 당사자였던 한국전쟁 휴전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민간인 납북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한국전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 납북된 사실과 이러한 민간인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토록 규정
-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을 촉구

● 美, 클린턴 미얀마방문 '북한' 주요의제 예고(12/1, 연합뉴스)

- 미국은 30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얀마(버마)에서 북한과의 우려스러운 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할 방침임을 예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클린턴 장관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1일 미얀마 외교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 사안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우리는 주로 북한과 버마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히 해 왔고, 버마 측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조치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해 검토 중인 조치들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 왔다"고 전함.
- 그는 미국의 구체적인 우려 사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버마 관계에 있어서 주로 우려하는 것은 미사일 및 미사일 장비 분야"라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단절하는 결정에 대한 좀 더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성문화된 보증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과 미얀마간의 핵협력설에 대해서는 "매우 면밀히 주시해 왔으며 이는 우리의 우려 사안"이라면서도 "현재로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조짐을 보지는 못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아마도 다른 (버마와 북한간의) 활동, 초기의 활동들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요 우려는 전자(미사일 및 미사일 장비)"라고 설명

● "北,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문화센터 건설"(12/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세계적 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앞에 가로 70m, 세로 124m 규모의 대형 문화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
- 캄보디아 부총리실 대변인은 "문화센터 계획은 캄보디아와 북한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발전시키



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함.

● **美전문가 일행 북한방문 마쳐...영변 방문 못해(12/3, 교도통신)**

- 미국의 핵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5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쳤으나 북한의 주요 핵시설 단지인 영변은 방문하지 못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3일 보도
- 방문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으며 일행 중 한 명인 미국과학자협회(FAS) 찰스 퍼거슨 회장은 영변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방문하지 못했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라고 답함.
- 과거에 미 국무부에서 북한업무를 맡았던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평양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北대량살상무기 테러조직 헤즈볼라에 공급"(1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산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이 이란 등지를 거쳐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에 공급됐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 방송은 미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이란: 미국의 우려와 정책 대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이 헤즈볼라 지원을 위해 북한산 무기가 헤즈볼라로 공급되는 중간 경유지인 시리아와 연계를 강화했다고 전함.
- 보고서는 또 지난 2006년 4월 이스라엘군의 아모스 야들린 정보국장의 발언,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란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BM-25 미사일을 이란에 제공했다고 설명

● **"北-日, 지난해 5월 물밑 접촉"(12/4, 교도통신; 도쿄신문)**

- 북한과 일본이 지난해 5월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4일 '복수의 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파이프'가 있는 민주당의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참의원 의원이 지난해 5월 중순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의 수석대표를 지낸 적이 있는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부장과 회담
- 당시 김 부장은 2008년 8월 북한과 일본의 실무자협약에서 합의한 납치 문제 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조건으로는 실무자협약 당시에 일본이 동의한 항공 전세기의 운항 규제 완화 등을 거론
- 당시 가와카미 의원이 "재조사위원회에 일본인을 넣지 않으면 일본 국민은 조사 결과를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부장은 "의견을 존중해 검토 하겠다"고 답변
- 가와카미 의원의 보고를 받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



는 "(납치 문제를) 재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중요한 진전"이라며 총리 관저 안에 전직 정부 고관을 대표로 하는 방북단 인선에도 착수했지만, 지난해 6월 하토야마 총리가 물러나면서 백지화됐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 이창근 黨 부부장, 11.28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위통일당 총비서와 담화(12/1, 증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경수로·저농축우라늄 빠르게 추진 중"(1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최첨단을 향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6자회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그의 평화적 성격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도 표명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정당한 평화적 핵활동을 걸고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의 해결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의무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때만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망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단계별로 이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이어 "자기 할 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

● 中 "6자 틀 안에서 관심사 논의해야"(11/3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30일 북한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추진 주장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참가국들의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해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그는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그같이 답함.

● **美 "北 경수로 · 농축우라늄 주장 우려"(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와 관련, "우리는 정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자신들이 스스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비판
-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中 "모든 국가에 평화적 핵이용권 있다"(12/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모든 국가는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권과 더불어 동시에 엄격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해 북한과 핵 협력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이 북한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국이 사실상 '용인'하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3. 대남정세

● **조달청 · 현대아산 '개성공단 소방서' 계약체결(11/28, 연합뉴스)**

- 조달청이 28일 현대아산 측과 개성공단 내 소방서 건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통일부측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현대아산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함.
- 최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과 북측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위한 주차장 확대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통일부 "北반응 봐가며 유연화 폭 · 속도 조절"(11/28,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북한 측의 반응을 봐가며 유연화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유를 갖고 정책의 내실을 다지면서 이니셔티브(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의 구상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최근 류 장관의 방미, 방중에 대해 "정책 당국자가 직접 가서 설명해 상대의 이해가 높았고 지지를 얻는 효과를 거뒀다. 필요하다면 통일부 실·국장들이 주변국을 다니면서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면서 통일의교 강화 방침을 밝힘.
- **통일부 "대북지원 밀가루 분배투명성 확인"(11/30, 연합뉴스)**
 - 통일부는 30일 대북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인사들의 방북 결과에 대해 "지원한 밀가루 분배가 (영유아들에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조중훈 인도지원과장과 민간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인사 등 총 5명은 협의회 측이 이미 지원한 밀가루의 분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5~29일 북한을 방문
 - 박 부대변인은 "앞으로도 분배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측 탁아소와 유치원 영유아의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 **北 "청와대 불바다' 빈말 아니다" 위협(11/30, 평양방송)**
 - 통일부는 30일 대북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인사들의 방북 결과에 대해 "지원한 밀가루 분배가 (영유아들에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조중훈 인도지원과장과 민간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인사 등 총 5명은 협의회 측이 이미 지원한 밀가루의 분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5~29일 북한을 방문
 - 박 부대변인은 "앞으로도 분배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측 탁아소와 유치원 영유아의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 **애기봉 '성탄트리' 등탑 불 밝힌다(11/30,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국방부가 기독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애기봉 등탑 점등 여부를 검토해온 결과 성탄절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성탄절 직전에 기독교 단체의 등탑 점등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해병대는 등탑 점등식을 전후로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해 대북경계태세



를 강화할 예정

- 북한은 애기봉 등탑 점등 움직임과 관련, 진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본격화되는 심리모략전'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괴뢰 군부는 애기봉 등탑의 불을 12월19일부터 1주일간 켜겠다고 떠들고 있다"며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

● 만월대 복구공사에 北인원 수십명 참여(12/2, 연합뉴스)

- 통일부는 2일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복구공사 및 보존작업에 북한측 인원 수십 명이 발굴, 조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당국자는 또 "남측 인원들은 개성공단 내 숙소에서 머물며 출퇴근 형식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작업은 23일까지 완료되고 추가작업이 필요한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함.
- 만월대 발굴사업은 정부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으로, 5·24조치 이후 1년6개월 간 중단됐으나 10월28일 남북 간 실무접촉을 계기로 사실상 재개



■ 기타 (대남)

- 김항식 국무총리의 '北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추모사(단호한 대응, 국방태세 확립 등) 비난 및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여론기만을 노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왜곡하며 '청와대 불바다' 위협 持續 (11/29, 중통·노동신문)
- '北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 군사훈련(11.23/연평도·백령도 일대) 관련 "全面戰 확대를 노린 모험적 기도의 산물"로 비난하며 "南北관계 파탄, 긴장상태 조성" 책임전가와 "단호히 징벌할 것" 持續 위협 (11/29, 중통·노동신문)
- 南 국방부의 애기봉 등탑 점등(12.19~) 방침에 대해 "긴장한 전연 일대에서 反北 심리모략전에 나서는 것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중단' 촉구(11/29, 중통·노동신문)
- 我軍의 '북 연평도 포격' 1주년 즈음 군사훈련 持續 비난과 이는 "남측의 체제통일 망상과 집권위기 모면기도"라고 강변 및 "주저 없이 맞받아 나갈 것" 천명(11/30,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국가보안법」(1948.12.1) 제정 63주년을 맞아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유린하는 반인권적 파쇼악법, 남북 대결 고취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보안법 철폐 투쟁" 선동(12/1, 중통·노동신문)
- 통일부의 '6.15선언실천 남측위원회 訪北(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 不許를 실례로 "南 당국이 南北 민간단체들間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은 결코 열릴 수 없다"고 비판(12/3, 중방)
- 南 당국의 '對北정책과 비핵·개방·3000'은 "반민족적 대결정책, 체제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필코 대결과 전쟁소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비난(12/3, 중통·노동신문·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IAEA사무차장 "핵사찰단 北북귀 준비됐다"(11/29)

- 허먼 네카르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29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사찰단을 북귀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IAEA 내 안전조치(Safeguard) 담당인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북귀할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사찰팀을 훈련 과정에 다시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2009년 IAEA 핵 사찰단을 추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개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은 물론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현재는 이뤄질 수 없는 상태임.
- IAEA내 서열 2위인 네카르츠 사무차장은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IAEA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6자 회담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 우리 정부와 IAEA가 사찰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2차 남북·북미대화 이후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임.
- 그는 또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면서 "북한에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주 활동은 우려되는 몇 곳을 위성 영상을 통해 추적하고 공개정보를 읽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과거보다 진전됐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최근 IAEA 보고서와 관련, "우리 정보는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 그는 또 IAEA에 신고된 핵물질과 활동에 대한 검증으로는 은밀한 핵활동을 차단할 수 없어 국가 전체 수준에서 핵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北 '핵활동 중단' 요구 사실상 거부(11/30)

- 북한은 30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



- 대와 최첨단을 향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대변인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할적인 문제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자기 할 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에 앞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UEP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볼 때 당분간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대변인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6자회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그의 평화적 성격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말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IAEA 사찰단의 수용 의사를 밝혔음을 시사했다.
 - 그는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단계별로 이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대응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내년 한미 양국의 대선정국을 앞두고 경수로 본격 가동이나 제3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실시해 6자회담과 북미회담 재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음.

● <정부 '핵활동 계속' 北 담화에 촉각>(11/30)

- 정부가 30일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핵 문제를 의제로 한 2차 남북·북미 대화 이후 후속 접촉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담화는 그동안 한미가 요구해온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임.
- 일단 정부는 이 담화를 북한의 협상용 발언으로 분석하고 있음. 핵 능력과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다시 강조하면서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전형적인 전술이라는 것임.
- 여기에는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는 100MW급으로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원에서 신포에 건설하려던 1000mw(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와는 전기출력면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렸음.
- 북한이 후속대화의 판을 깨고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후속 대화에서 경수로 제공을 관철하기 위해 발표한 담화가 아니냐는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북한의 이 담화가 남북·북미 간 북핵 후속대화 움직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의 성명이나 담화에는 협박성 발언도 포함되는 등 항상 강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담화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후속 대화 움직임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다만 정부 내에는 이른바 남북·북미 간 3라운드 접촉을 앞둔 시점에 북한 외무성이 이런 담화를 낸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북한이 최근 보여 온 태도와는 결이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임.
- 외교기에는 이를 두고 그동안 UEP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놓고 대립했던 남북·북미간의 이런 입장차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담화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 일각에서는 북한이 언급한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막기 위해 한미가 앞으로 후속대화에서 비핵화 사전조치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옴.

● 中 "6자 틀 안에서 관심사 논의해야"(11/30)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30일 북한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추진 주장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참가국들의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해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그같이 답했음.
- 북한 외무성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최첨단을 향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따라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는 회담 재개의 사전 조치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주요 당사국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

● 美 "北 경수로·농축우라늄 주장 우려"(12/1)

- 미국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거듭 우려를 표시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와 관련, "우리는 정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자신들이 스스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비판했음.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우라



늄 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음.

● 데이비스 美특별대표 다음 주께 방한할 듯(12/1)

-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신임인사차 다음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임. 외교 소식통은 1일 "상견례와 북핵 관련 정책 협의차 데이비스 신임 특별대표가 한·중·일을 순방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에는 8일쯤 방문하는 일정으로 현재 협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 스티븐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의 후임인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달 말까지 주(駐)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대사로 근무하다 최근 귀국해 업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음.
- 클리포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를 대동하고 방문하는 데이비스 대표는 방한 기간 우리측 6자 회담 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2차 남북·북미대화에 대해 평가하고 후속 대화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됨.

● 러, 北에 핵활동 중단·국제사찰 수용 촉구(12/1)

- 러시아가 북한에 핵 프로그램 중단과 핵확산금지 체제로의 복귀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 러시아 외무부는 1일 발표한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북한의 담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 우라늄 프로그램 추진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논평은 "우리는 한 번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북한의 주권에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 권리가 보편적인 핵비확산 체제의 틀 밖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뤄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음.
- 논평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서 표현된 국제사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증 체제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 움직임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음.
- 논평은 "그 첫 번째 행보로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연변 핵센터의 우라늄농축시설들을 사찰하도록 IAEA 전문가들을 초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무부는 "그렇게 함으로써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가 북한에 핵활동 중단과 국제사찰단 수용을 이처럼 강하게 재촉한 것은 이례적임. 러시아의 강도 높은 논평은 우선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
-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북한의 핵 프



로그램 중단과 사찰단 수용을 6자회담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온 한국과 미국 등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도 분석됨.

- 이는 그동안 무조건적 6자회담 재개와 회담 과정에서의 핵문제 논의를 요구해온 북한 측 주장에 상당 정도 공감을 표시해오던 러시아의 기존 입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나. 미·북 관계

● 北, 美하원 발의 '위성부품 이전금지' 법안 비난(11/28)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미국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위성부품 이전금지' 법안을 "우주를 독점물로 만들려는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했음.
- 중앙통신은 이날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제목의 '백서'에서 "법안은 인공위성과 부품의 직·간접 이전은 물론 대기권 밖의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까지 금지시키도록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음.
- 이어 "우리나라(북한)는 '우주조약과 '외기권(대기권 밖)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거쳐 2009년 운반 로켓 '은하-2'호로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며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백서는 중국이 최근 성공한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天宮) 1호와 무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8호의 도킹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하고 러시아와 인도, 이란 등의 우주개발 상황을 덧붙여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정당했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하워드 버먼 의원(민주, 캘리포니아) 등이 지난 1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나리와 중국, 북한에 대해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과 중국, 쿠바, 이란, 수단 등의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美, 미얀마에 북한과의 관계 단절 촉구(12/1)

- 미얀마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일 미얀마 정부에 무기 거래 등 북한과의 위법적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 당국이 최근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주도의 메콩강 개발 사업에 미얀마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이피도에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존중, 북한과의 위법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미얀마 정부가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존중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미국과의 관계 증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을 금지하



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美전문가 일행 북한방문 마쳐...영변 방문 못해(12/3)

- 미국의 핵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5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쳤으나 북한의 주요 핵시설 단지인 영변은 방문하지 못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음.
- 방문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으며 일행 중 한 명인 미국과학자협회(FAS) 찰스 퍼거슨 회장은 영변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방문하지 못했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라고 답했음.
- 과거에 미 국무부에서 북한업무를 맡았던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평양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북한은 영변에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경수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지난달 29일 방북했으며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이들 학자를 활용해 미국에 대해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 북한은 미 전문가들이 방북 중이던 지난달 30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음.

다. 중·북 관계

● 中 연변기업, 北 김책시 철광 개발 나서(11/30)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철광기업이 북한 김책시의 철광 개발에 나섰다고 연변일보가 30일 보도했음.
- 신문은 연변 안도(安圖)현의 진룡(金龍)철광이 올해 초 북한과 협의를 거쳐 김책시의 철광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미 채광을 위한 장비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음.
- 신문은 김책시 철광의 매장량이나 연간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운송한 채광 설비 규모가 6천만 위안(10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상당한 규모를 갖췄을 것으로 추정됨.
- 지린(吉林)성 진룡경제무역유한회사의 자회사인 진룡철광은 2007년 설립됐으며 안도에 총 900여만이 매장된 3개의 철광 광산을 보유하고 있음. 이 기업은 2008년 3월부터 이들 광산에서 연간 10만톤의 철광을 생산해왔으며 2009년 설비를 확충, 생산 능력을 연간 20만톤으로 끌어올렸음.
- 중국의 완상(萬向)자원유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북한 혜산동광과



2007년 합자해 설립한 해중광업합영회사가 지난 9월부터 해산 구리광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는 등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지하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은 북한 최대 철광인 무산 광산의 50년 채굴권도 확보했음.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교역액의 80%를 넘어선 가운데 대중 주요 수출품이 석탄과 철광석, 아연 등 광물자원이어서 북한 내부에서도 급속한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 中특구법과 유사한 새 특구법 마련"(12/4)

- 북한이 나진·선봉과 황금평 등 경제특구에 적용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 조만간 전면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4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효율적인 외자유치 조달방안, 구체적인 세무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었으며, 최근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 인사들이 이 법안을 회람하고 있음.
- 대북소식통은 "이 법안은 특구 개발에 대한 세무절차 등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주요내용은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을 찾은 김성기 부상이 선전시를 찾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새 경제특구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중국 언론은 김 부상이 지난달 27일 장원(張文) 선전시 부시장을 만나 "선전의 비범한 발전상은 사람들을 고무하고 있다. 선전특구의 성공적인 경험을 배우는 것도 중국을 찾은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북한은 김 부상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선전 방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음. 중국은 과거 선전을 개혁·개방의 실험지로 삼아 이 지역의 성공 경험을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 등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해 큰 성공을 거뒀음.
- 선전시가 성공적인 개혁·개방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특구에 '수권입법권'을 부여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친기업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특구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본다. 북한이 특구를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게 투자환경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인데 북한 역시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한편 북중 양국은 작년 12월 황금평을 임가공 단지로 합작개발하기로 하고 '황금평 특구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절차 등은 외부에 알려진 것이 없음.



라. 일·북 관계

● "北-日, 지난해 5월 물밑 접촉"(12/4)

- 북한과 일본이 지난해 5월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4일 '복수의 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파이프'가 있는 민주당의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참의원 의원이 지난해 5월 중순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의 수석 대표를 지낸 적이 있는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부장과 회담했음.
- 당시 김 부장은 2008년 8월 북한과 일본의 실무자협약에서 합의한 납치 문제 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음. 조건으로는 실무자협의 당시에 일본이 동의한 항공 전세기의 운항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음.
- 당시 가와카미 의원이 "재조사위원회에 일본인을 넣지 않으면 일본 국민은 조사 결과를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부장은 "의견을 존중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
- 가와카미 의원의 보고를 받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는 "(납치 문제를) 재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중요한 진전"이라며 총리 관저 안에 전직 정부 고관을 대표로 하는 방북단 인선에도 착수했지만, 지난해 6월 하토야마 총리가 물러나면서 백지화됐음.
- 당시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난하고, 한·미·일 3국이 대북 압력을 강화하던 때였음. 북한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일본 측에 접근한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대해 하토야마 전 총리는 당시에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납치 문제가 움직일 수 있다면 중요한 얘기가 되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마. 기 타

● 北리수용 합영투자위원장 내달 영국 방문(11/29)

- 북한 리수용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관리 3명이 다음 달 초 영국을 방문해 영국 의회 등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음.
- 영국의 글린 포드(Glyn Ford) 노동당 의원은 북한 관리들이 5일간 일정으로 방영해 데이빗 엘튼 상원 의원 등을 만난 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인근 수력발전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지난여름 북한을 방문해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나는 등 10여 차례 방북했던 포드 의원은 "북한이 수력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어 영국 정부가 지난 9월 수력발전 전문가 2명을 북한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한편 영국 외무성은 28일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Critical Engagement)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포드 의원 등이 주장하는 비판적 교류란 북한의 핵개발 문제나 인권 탄압의 문



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임.

● 남북적십자, 제네바서 '연내 이산상봉' 탐색(11/30)

- 남북 적십자사 고위 인사들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연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유중근 한적 총재가 지난 24일 국제적십자자연맹(IFRC) 총회에서 백용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고령자가 대부분인 이산가족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며 연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백 부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물리적으로 1~2개월이 필요한 만큼 연내 상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적 관계자는 전했다.
- 이 관계자는 "백 부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남측과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지난 7월 김용현 사무총장과 만남 때보다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 사무총장은 올 7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어얼뉘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사 리더십회의'에서 백 부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식량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한편 유 총재는 29일 귀국했지만 김 사무총장 등 한적 대표단은 아직 제네바에 체류하고 있어 이들이 백 부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은 남아 있음.

● "WFP, 12월중 대북식량 3만2천t 지원"(12/3)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이달에 식량 3만2천700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지원 담당관은 12월중 올 들어 월 지원 규모로는 가장 많은 약 3만2천700t의 식량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RFA측에 밝혔다. 이는 약 350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 WFP는 지난달에도 북한주민 152만 명에게 식량 약 4천t을 지원했다. 스카우 담당관은 11월의 식량 지원 규모는 10월중 145만 명에게 약 6천400t의 식량을 지원한 것에 비해 40% 정도 줄어든 것이라며 "원료가 부족해 12곳의 식품가공 공장에서 만드는 혼합식품과 영양과자의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북한의 곡물 확보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주민 세 명 중 한 명은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모금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내년 3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60세 이상 노인 등 350만 명에 대해 식량을 제공하려면 약 2억1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지원금은 2일 현재 약 6천600만 달러로 필요 예산의 32%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DMZ·북한지역까지 유해발굴 협력키로(11/28)

- 비무장지대(DMZ)와 북한지역에서도 한미 양국의 6·25전사자 유해 발굴 협력이 원칙적으로 가능해 졌음.
- 국방부는 28일 한미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워싱턴 소재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사무국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 양국 국방장관을 대신해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피터 베르가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 참모장이 서명한 이 MOA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한국군과 미군, 유엔군, 카투스(KATUSA)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이 DMZ와 북한지역에서 전사자 유해를 공동발굴 할 때 미측도 이에 협력하기로 명시했음.
-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의 평안북도 운산과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33차례 작업을 통해 6·25전쟁 당시 유해 220여구를 발굴한 경험이 있음. 미측은 내년 봄 북측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할 예정임.
-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한 공동 유해발굴 추진 때 미측의 기술을 전수받고, 6·25 참전국의 실종자 유해발굴 및 인도를 통한 국제적 신뢰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또 MOA는 한미가 공동으로 발굴지역을 조사, 발굴 및 유전자(DNA) 감식을 하고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포함해 양측이 발굴한 전사자 유해 모두를 상호 인도하는 절차도 명시했음.
-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남한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라도 한미 공동감식을 한 다음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면서 "이는 미측이 남한 내에서 마음대로 유해를 발굴해 반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음.
- 국방부는 MOA 체결식이 끝난 뒤 현재 남측지역에서 진행 중인 전사자 유해발굴과 감식 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 상영했음.

●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11/29)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음.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음.
-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감.
-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임.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음.

● 힐러리 "한미 FTA, 양국 모두에 윈윈"(11/3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차 방한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모든 가치 있는 일은 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또 "한국 정부로부터 부산총회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무척 기뻐다"면서 부산총회에 남다른 기대를 표명했음. 그는 이어 회담에 배석한 성김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소개하며 "새로운 미국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음.
-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형진 북미국장 등이,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성김 대사 등이 배석했음.

● 美 아인혼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차 내주 방한(12/1)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제4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주 방한함.
- 외교부 관계자는 1일 "한미 양국 수도를 오가면서 개최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일정에 따라 이번에는 아인혼 특보가 한국에 방문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음.
- 미국측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인 그는 6일 박노벽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와 본 협상을 한 뒤 7~8일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임.
- 지난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오는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연장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 우리측은 협정 만료 이전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평화적 핵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기도 한 아인혼 특보는 방한 기간 북한문제 및 이란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미국 등이 추가로 조치를 내놓은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아인혼 조정관이 한국에도 제재 강화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음.
-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란산(産) 원유 수입 중단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



는 "미국의 추가제재에 이란의 원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미측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 정부 "내년 한미 미사일지침 협의 계속"(12/4)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도 양국 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4일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현 미사일지침의 (개정문제에 관한) 실무차원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식통은 현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미사일지침의 사거리 연장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안보수요와 전략환경 등을 고려해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양국은 수년 전부터 현 미사일지침이 묶어놓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를 500~1천km 이내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 소식통은 미사일지침 협상 완료 시점에 대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회의를 하다 보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거리 연장 협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 미 측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줄 경우 미국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은 "올해 양국이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정부 관계자는 "대응책에는 지휘통신(C4I)체계와 감시정찰(ISR), 공격 대응, 공중요격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01년 합의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게 되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300km 이상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미측은 이를 탄도미사일의 마지노선으로 정해 동맹국과 미사일 쌍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정부 소식통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단·중·장거리미사일의 수량과 사거리 모두가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완전히 새로 개발한 것도 있고 기존의 미사일의 수량과 사거리를 늘린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中 공산당 청년 간부 대표단 방한(12/4)

-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의 청년간부 대표단이 외교통상부의 초청으로 5일부터 4박5일간 한국을 방문함.
-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왕슈샤(王淑霞) 중앙대외연락부 참서관이 이끄는 대표단 10명은 방한 기간 한국 외교관 및 한나라·민주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서울대 중국연구소·비무장지대(DMZ)·경주 문화유적 등을 방문할 계획임.
- 특히 1박2일 간의 경주 방문에는 외교부의 실무급 외교관들이 동행해 일대일 교류와 팀별 활동 등을 함께 함.
- 이번 행사는 외교부와 중앙대외연락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청년 직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우리 청년 외교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 외교부 관계자는 "중앙대외연락부는 중국 공산당과 외국 정당 간 교류를 담당하며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면서 "이들과의 교류 사업은 한·중 관계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음.

다. 한·일 관계

● "李대통령, 日과 안보협력 협의 의사 피력" < NHK > (11/29)

-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의원단에 한일 안보협력을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NHK방송이 29일 보도했음. 이 방송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를 예방한 일본 의원단에 북한의 핵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시아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3국이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한일 간에도 대화할 수 있게 된 만큼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고 밝혔음.
- 이는 이 대통령이 이달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방위협력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 한일 방위협력은 올해 초 한국군과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합동훈련, 대규모 재난 구조 활동 시 식수와 연료 등을 서로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하지만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외교관계가 냉각되면서 협력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일한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24명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는 자리에서 다음달 17~18일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日 국회, 내달 한일 원자력협정 비준"(11/29)

- 일본 국회가 다음달 초 한국 등 4개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비준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민당은 정부 간 서명을 거쳐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러시아, 요르단,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을 현재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다음달 9일)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음.
- 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요구했으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국회 심의가 지연됐음.
- 민주당과 자민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고, 원전 수출에 대한 신중론이 있지만 원자력협정이 국가 간 협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 신용 확보를 위해 비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 대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訴 기각(12/1)

-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멋대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지바 가쓰미(千葉勝美) 재판장은 지난달 30일 구(舊)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들의 유족 약 25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음.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음.
-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일본 후생노동성 전신인 후생성 인양(引揚) 원호국은 1956년 4월 '야스쿠니 신사 합사 명부 사무 협력에 관하여'라는 통지서에서 각 지자체에 합사 사무에 협력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각 지자체는 1956~1972년 전몰자 명단을 보내는 등 야스쿠니신사가 A급 전범과 한국·대만인 등을 제멋대로 합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음.
- 원고들은 2006년 5월25일의 1심과 2009년 10월29일 2심에서도 패소했음. 이희자씨 등 일부 유족과 생존자이면서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중(86)씨 등은 2007년 2월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새로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지난 7월21일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지낸다고 해서)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판결했음.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합사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사카(大阪)와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에서도 제기됐음.

● "日 정부, 한국에 비상용 석유 비축 추진"(12/3)

- 동일본대지진 직후 심각한 석유 부족 현상을 겪은 일본이 한국에 비상용 석유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지식경제부에 비공식적으로 이같이 요청해 동의를 얻었음.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할 예정임.
- 석유 비축 후보지로는 부산 등을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국에 석유를 비축하길 원하는 것은 저장 시설이 부족한 동해 인접 지역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대비한 것임.
- 태평양 쪽에는 저장시설이 많은 편이지만 동해 쪽으로 석유를 나르려면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산맥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임. 일본은 자국 내에 주로 원유를 비축하는 만큼 한국에는 곧바로 쓸 수 있는 석유 제품을 마련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사히신문은 "에너지 확보는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외국에 석유를 비축하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앞서 일본 석유판매 대기업인 이데미쓰코산(出光興産)과 JX에너지(JX 닛코닛세키에너지)도 한국기업과 손을 잡고 석유제품 중 하나인 등유를 한국 내에 비축하기 시작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사사건건 '대립각'〉(11/29)

- 중국이 미국에 대립각을 바짝 세우고 있음.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발리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날을 세운 미중 양국이 이제는 미얀마, 파키스탄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임.
- 중동 이슈인 시리아와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음. 중국은 무엇보다 미국이 관계회복을 노리는 미얀마 '수성'에 신경 쓰고 있음.
-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29일 방중한 미얀마 군의 민 아웅 라인 최고사령관을 환대한 게 단적인 사례임.
-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이례적으로 라인 사령관을 접견하고 "중국이 미얀마 인민의 생활 증진을 지지한다"며 경제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음.
- 라인 사령관은 이어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의 회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중국과 미얀마 간에 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음.
- 미얀마 군 고위인사에 대한 중국의 이런 환대는 시기적으로 적잖은 의



- 미가 있음. 미얀마가 근래 양국 합작사업인 미트소네(중국어명:미쑹) 수력 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 중국 기업들에 큰 손해가 예상되면서 양국 간 마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사실 미얀마는 군사정권이 철권통치한 지 20년 만인 지난해 11월 총선을 통해 민간에 권력이 이양됐고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화에 가속이 붙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
 - 중국은 겉으로는 서방과 미얀마 간의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속으로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함. 국제사회에 철저하게 고립됐던 미얀마 군사정권을 두둔하면서 챙겨왔던 기득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임.
 - 중국은 특히 미국이 최근 호주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인도네시아에 최첨단 F-16 C/D 전투기를 수출하는 한편 베트남·필리핀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기득권을 압박해오는 가운데 동남아의 교두보인 미얀마마저 미국 '수중'에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표정임.
 -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테인 세인 미얀마 정부를 군부를 통해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미얀마 군의 라인 사령관을 환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중국이 지난 26일 발생한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파키스탄 오폭사건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함.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중국은 이번 사건에 강렬한 우려를 표시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도 가세했음.
 - 양 부장은 같은 날 하나 라바니 카르 파키스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음. 양 부장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독립, 주권, 영토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음.
 - 양 부장의 이런 제스처는 사실상 미국과 나토에 대한 견제 의지 표명이란 점에서 주목됨. 나토의 파키스탄 오폭 사건이 지난 1999년 5월 세르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서방 전투기의 오폭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한 톤으로 이번 사건을 압박한다는 견해도 있음. 당시 세르비아의 유혈사태에 나토군이 개입한 가운데 미군 전투기가 중국 대사관을 잘못 폭격했고 그 때문에 중국인 3명이 사망해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들끓었음.
 - 중국은 러시아와도 연대해 이번 파키스탄 오폭 사건을 국제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 시리아 유혈 사태와 이란 핵 문제에서도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음.
 - 시리아 정부가 유혈 진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최근 내전 양상으로 치닫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외부세력 배제라는 큰 원칙에서 출발해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 등 서방의



- 직접 개입에 반대하고 있음.
- 중국은 또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추가제재에 반대 관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미국이 지난 22일 이란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및 개인 수십 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데 대해, 중국이 "압박과 제재로는 이란 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중 양국이 위안화 환율절상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한 경제 분야의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군사·안보·외교 분야에서도 갈등이 점차 커져 향후 각종 국제 이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 中, 美의 태양광 패널 조사 결정에 우려(12/4)

- 중국과 미국 간에 태양광 패널 덤핑 분쟁이 깊어지고 있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으로 2일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의 덤핑 공세에 따른 미국 업체들의 손해를 조사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4일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패널 산업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미국 ITC가 충분한 증거도 없이 상대의 반대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음.
- 상무부는 "이처럼 사실에 들어맞지 않고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을 띠는 미국 측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는 나아가 중국·미국 무역관계와 양국 기업들의 상호 호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상무부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ITC의 조사 의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달 10일 "미 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면 양국 에너지 협력에도 손해가 끼쳐질뿐더러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협력 노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ITC는 중국 정부가 300억 달러(약 34조원)가 넘는 보조금을 태양광 패널 산업에 건넸고 이런 지원에 힘입은 저가 중국산 수입품 탓에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산업이 파산했다고 보고 중국의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한 조사 착수를 의결했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오히려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신청을 주도한 미국의 '솔라 월드'가 지난해 미 정부로부터 거액의 세금 혜택과 공공보조금을 받았다면서 정작 반보조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솔라 월드'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특히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정책과 보조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임.
- 잉리(英利), 상더(尚德), 텐허(天合) 등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도 미국



의 조사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공동 대응의지를 다지고 있어 태양광 패널 덤핑 조사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日 전직 관료 '美에 TPPA 외압 요청'(12/4)"

- 일본 전직 관료들이 미국측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과 관련해 일본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음.
-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2일(현지시간) 일본의 전직 관료 여러 명이 자신을 찾아와 "(일본에) 약간 외압을 가해서 TPPA 참가가 일본에 유익하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음.
- 일본 전직 관료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음. 커틀러 대표보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TPPA 참가 여부는) 일본 경제의 장래와 관련이 있는 큰 결정인 만큼 교섭 상대국(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음.
- 또 "미국 정부는 일본의 국내 논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TPPA 참가 여부 협의 참가) 결정은 일본 자신의 결단이다"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바. 중·일 관계

● 中, 日에 '센카쿠 경계 획정 논의' 제안(11/28)

- 중국이 일본에 동중국해의 경계선 획정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다음 달 중순 중국 방문에 맞춰 '유엔 해양법조약'에 근거해 동중국해의 중일 경계 획정에 관한 협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음.
- 교도통신은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토문제를 부각시켜 국제 분쟁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 일본은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중국해의 경계 획정과 관련 일본은 양국의 연안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중간선보다 일본 쪽에 위치한 오키나와 해역까지 자국의 대륙붕을 확장하려 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1997년 어업협정과 2008년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할 당시엔 경계획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음. 양국의 해양법조약에 관한 협의는 2003년 8월 중국이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에 착수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됐음.



● 〈中, 日 마쓰시타정경속에 각별한 정성〉(12/1)

- 중국이 일본의 정치인 양성소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한즈장(韓志强) 주일 중국대사관 공사는 지난달 29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ヶ崎)시에 있는 마쓰시타(松下) 정경속을 방문했음.
-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2, 13일로 예정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중 준비 작업차 (마쓰시타정경속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한 공사는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고, 마쓰시타 정경속에서 반년 간 연수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음.
- 중국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3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회담에 응하는 등 이례적으로 환대했음. 겐바 외무상은 마쓰시타 정경속 출신임.
- 이를 두고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대일 전략으로서 정경속 출신자와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고 추측했음.
- 마쓰시타 정경속은 일본 전자제품 회사 파나소닉(구 마쓰시타전기)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1894~1989)가 1979년에 설립했음. 1기생인 노다 총리를 비롯해 8기생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책조사위원장, 겐바 외상 등 민주당과 자민당 현역 의원 28명을 배출했음.

사. 미 · 러 관계

● "남북러 가스관은 러시아의 중국 견제용"(11/28)

-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러시아 학자가 주장했다.
-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세계경제 · 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은 2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스관을 건설하면 중국을 견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미헤예프 부소장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건설한다는 것은 북한에 정권 변화가 있고 북한이 일반적인 시장 및 개방 경제로 변모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그는 "이런(북한의 변화와 같은) 조건이 없다면 실패하고 예측하기 힘든 북한에 그 누구도 정치적 · 경제적 리스크를 안고서 큰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헤예프 부소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혁신외교'를 주창하며 기술적 동맹 성립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기술적으로 고립되고 취약해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 외교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